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5
----------	------

발의연월일 : 2024. 6. 28.

발 의 자 : 강유정 · 박희승 · 김영배  
복기왕 · 이훈기 · 강준현  
박지원 · 정을호 · 백승아  
박홍근 · 박해철 · 박 정  
조 국 · 송재봉 · 손명수  
서영교 · 이용우 · 허 영  
오세희 · 김영환 · 이광희  
임오경 · 최민희 · 문금주  
문대림 · 양문석 · 김 현  
이기현 · 위성곤 · 조계원  
박홍배 · 민형배 의원  
(32인)

##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 원칙’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문화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자 함. 또한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문화행정의 협치를 위해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문화정책위원회) ① 문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2에 따른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u>&lt;신 설&gt;</u>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u>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제8조의3(문화정책위원회) ① 문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제8조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2에 따른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  
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위  
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